

# 관세청, 대미 수출기업 설문조사 결과 발표 ... 현장 중심 지원 확대한다

- 품목분류, 비특혜 원산지 판정 지원 등 수출기업 맞춤형 관세행정 서비스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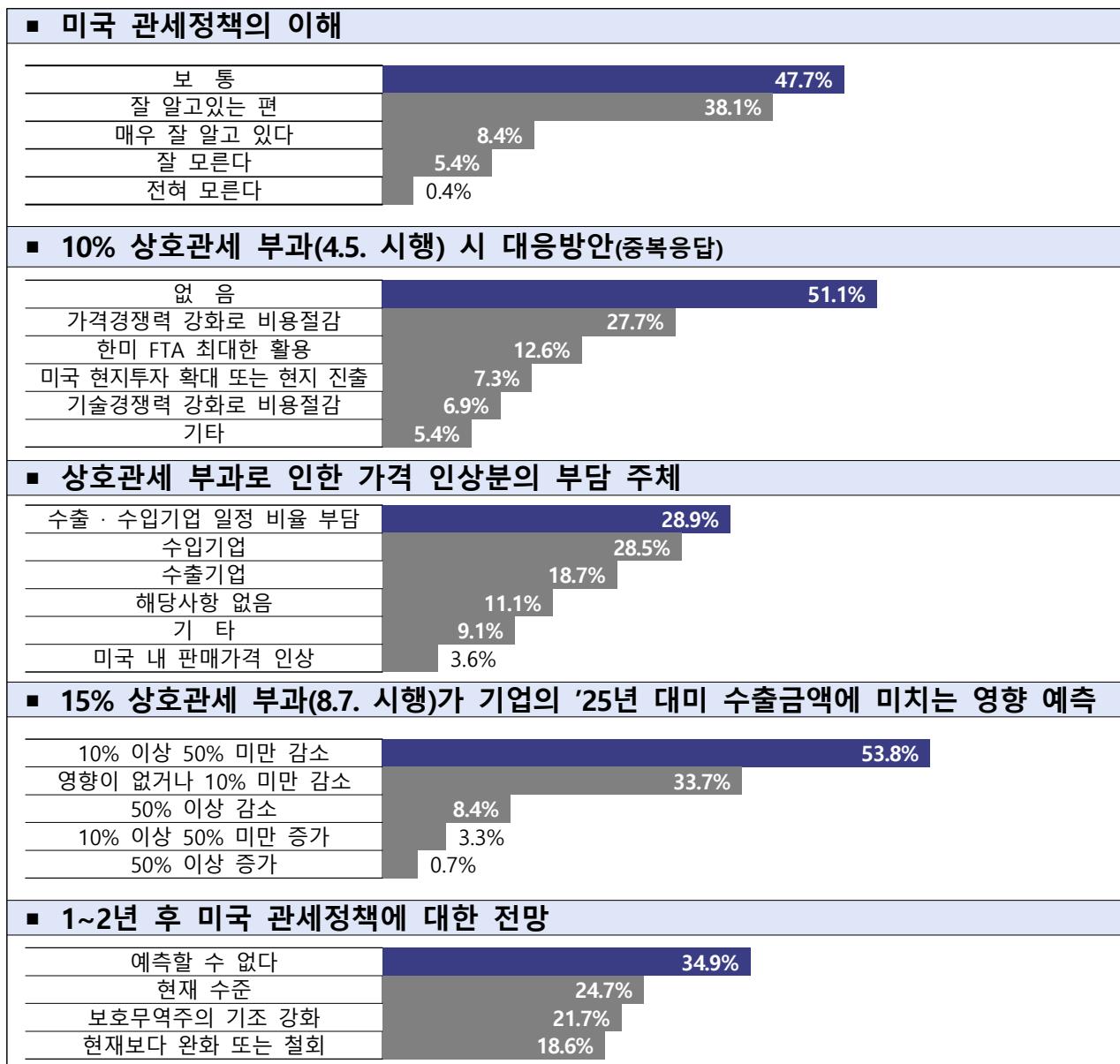
- 관세청은 미국의 우리나라 상호관세(8월 7일부터 15% 부과) 결정을 계기로 대미 수출 중소·중견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인식과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9월 8일(월) 발표하였다.

## < 설문조사 개요 >



## 대미 수출기업의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이해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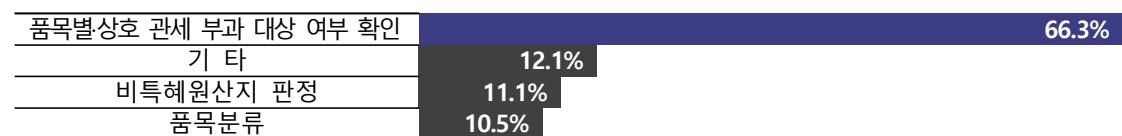
-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보통 이상 알고 있다는 응답이 94.2%에 달했으나, 51.1%의 기업이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.
  - 수출기업들은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금년도 대미 수출규모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고,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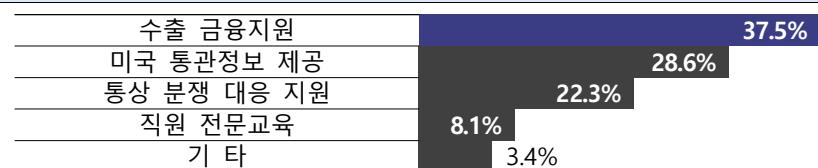
## 미국 통관 애로사항과 정부지원 수요 등

- 대미 수출기업들은 미국 통관절차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 수출물품이 품목별 관세 또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확인(66.3%), 비특혜 원산지 판정(11.1%), 품목분류(10.5%)를 꼽았다.
-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 정책은 수출 금융지원(37.5%), 미국 통관정보 제공(28.6%), 통상분쟁 대응 지원(22.3%) 순으로 나타났다.
- 한편, 관세청에서 실시한 여러 지원정책 중에서는 한-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(41.2%), 원산지 사전 판정 제도(31.5%), 품목별 비특혜원산지 판정 체크포인트 제공(27.1%) 등 기업들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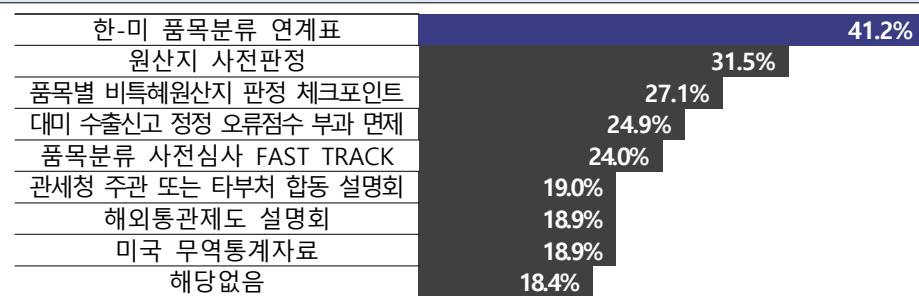
### ■ 미국 통관절차 중 가장 어려운 점



### ■ 정부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



### ■ 대미 수출에 도움이 된 관세청의 지원책(중복응답)



□ 관세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기업이 미 통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.

- 품목분류의 경우, 한-미 품목번호 연계표\*에 품명을 병기하여 활용성을 높인다. 또한 미국 관세당국의 품목분류 사례를 모은 질의응답집을 제작하여 배포한다.

\* 미국이 관세부과 대상으로 공표한 물품의 품목번호를 우리 수출기업들이 알기 쉽도록 한국의 품목번호와 연계하여 작성한 표

- 원산지 판정의 경우, 미 관세정책 시행 이후 수출기업이 미국 관세국경 보호청(CBP\*)에 신청하여 판정받은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관련 산업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.

\* (U.S. **C**ustoms and **B**order **P**rotection) 우리나라 관세청 +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+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기능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관세부과 및 징수 실무 담당

- 아울러 수출 금융지원 제공을 위해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·기관과 기업을 적극 연계하고,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지원하는 부처들과 통상환경 대응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.

- 이명구 관세청장은 “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운 통상환경에 직면한 대미 수출 중소·중견기업을 위해서 전방위적 관세행정 지원이 필요한 시점”이라고 밝히며,
  - “이들 기업과 함께 협력하여 대미 수출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”고 강조하였다.

담당 부서	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사무관	임주연 (042-481-3210) 김학수 (042-481-3202)
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	--

